지역개발연구 제44권 제1호(통권 58집). 2012년 6월. pp.139-158

한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정책의 추진과정과 지역차원의 과제

나 주 몽*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장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은 고용없는 성장, 고령화, 지역 경제의 침체, 지역 사회의 해체에 대한 우려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지역 경제 침체와 지역간 격차의 확대, 소비자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 사회 구조로 전환, 지역 만들기와 연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계기로 사회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는 최근 지역 경제에서 정책적 대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에 대한 추진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차원의 정책적인 과제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의 과제는 먼저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해 지자체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기업 간의 창조적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내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창업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의 중심적 역할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체와 관련사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네트워킹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비즈니스 펀드를 조성하고, 중앙정부의 다양한 자금 지원 정책은 지역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농산어촌으로 귀농·귀촌하는 인재와 토착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매너저 역할을 할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Ⅰ. 서 론

전 세계는 시장경제의 메카니즘을 기본으로 한 효율적인 경제활동과 자본주의 자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명분하에 국가의 규제를 탈피하고 시장개방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등 시장중심의 자유경쟁을 주창하게 되었고, 신자유주의의 신장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을 경쟁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하여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대기업 및 첨단기업들은 보다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기회의 창출을 통해 富를 축적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경쟁에서 오는 위기감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의 보완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해 원가절감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의 경제환경 속에서 한국에는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 지역경제침체, 공동체 해체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은 기술혁신을 통한 노동력의 기계화 및 자동화의 대체와 더불어 IT와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변모해 가면서 기존 산업사회의 퇴출인력이 재취업의 기회를 얻기 힘들어 지게 되었다. 또한 고급 일자리에 대한 취업기회의 감소 및 실업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지역경제침체 경향에 있어 시장의 글로벌화는 국가의 경제를 넘어 자본, 생산품, 노동의 이동을 통제하던 정부의 능력,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진전과 더불어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이 진행되어 우수 산업인력이 구조적으로 대도시로 집중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도시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지역개발전공 교수

집중화 현상은 1, 2차 전통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외부의존성 심화와 자립적 지역순환체계 약화에 의한 지역침체 현상은 장기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지역문제의 대두는 생활자의 이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사회구조로 전환, 지역만들기와의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계기로서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김재현, 2010).

김진범외(2009)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사례조사를 통해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 및 지원 제도 등을 분석하고, 둘째, 국내 커뮤니티 비즈니스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며, 셋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함유근외(2010)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과 유형, 외국의 운영사례와 우리나라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현주소, 국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공요인 등을 제시하였다. 김태곤외(2011)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중장기 육성방안에 대해 농촌형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상을 한정하고, 농촌형 커뮤니티비즈니스를 농산업영역, 자원·환경영역, 사회·복지영역, 도농교류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3차년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영수외(2008)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형 유형 중 우리나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빈부격차의 해소 및 취약한 지역경제 향상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사회친화형 사회적 기업의 한 유형으로써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기능성과 활성화에 대해 살펴 보았다.

한국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해 일본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차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로 川上聰一(2007)와 김혜민(2010)이 있다. 먼저 川上聰一(2007)은 일본의 즈시시청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사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현대 일본의 사회현상의 근저에는 행정의 시민에 대한 보호자적인 시선,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일본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공공성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김혜민(2010)은 일본 토치기현 이와후네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었고, 사회자본의 증식에 기여했는지 고찰하였다.

유정규(2011)는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이 본격적인 논의는 크게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소개단계(2006~07), 본격적인 논의단계(2008~09)단계, 정책적 전개에 의한 확산단계(2010이후)로 나누어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사례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아직 제도화를 통한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차원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을 정착시키기고 과제를 도출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적 대안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해 한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에 있어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의 추진과정과 지역차원에서 전라남도 사례의 특징을 마을기업과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4장에서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Ⅱ.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과 특성

1.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는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개념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용어는 `70년대 중반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Community Business Scotland(CBS)라는 중간지원조직의 형태인 유한회사에서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김선기(2011a)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적 수법을 차용하고, 그 활동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고, 김윤호(2010)은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그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내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조직체 또는 사업으로 정의 하였다.

Pearce(1993)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지역커뮤니티들이 스스로 지속적인 거래 벤처를 통해 스스로 직업을 만들어 내는 경제자립 형태를 의미한다고 했다. Tony et al.(2006)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커뮤니티가 소유한 조직으로 지역 니즈(needs)가 발생하거나 혹은 초과수익을 조직에 재투자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개선하거나 확대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거래활동이라고 했다. 주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요소로는 커뮤니티의 소유권과 거래방법으로 소유권에 관해서는 장소와 이익주체를 포함한 공동체(community)를 의미하고, 거래방법의 요건은 경제활동을 통해 자활이 가능하거나 향후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커뮤니티비즈니스 보다는 커뮤니티 기업(community enterprise)이란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데, Tracey et al.(2005)는 커뮤니티 기업이라는 용어에는 기업의 정신인 기업가 정신과 커뮤니티의 정신인 시민정신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들 기업의 핵심구성요소는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을 커뮤니티 장소로, 이익을 지역의 커뮤니티에 분배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란 용어는 1994년부터 사용했고, 이는 커뮤니티(community)와 비즈니스(business)의 결합을 의미하며,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지역의 과제를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비즈니스 수단을 사용해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에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잠재된 노동력, 원재료, 노하우, 기술과 같은 자원을 발굴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을 의미한다(細內信孝, 2001).

이처럼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은 지역에 주민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이 안고 있는 공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적 수법을 차용하고, 지속적으로 재화·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초과이윤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특성과 구성요소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특성은 사업주체, 사업대상, 사업방식 등과 같은 핵심요소를 통해 그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사업 주체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주민, 주민단체, NGO, 기업 등 다양한 공동체가 사업주체이며, 주민은 지역공동체 경영사업의 이용자인 동시에 경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대상은 영리기업과 비영리활동의 중간 영역으로서 지역만들기, 상가활성화, 특산품 개발·마케팅, 보육·교육, 환경, 문화, 복지, 시설운영 등 지역문제 전반을 다루며, 사업방식은 기업경영방식, 적정이윤의 비영리 운영,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특성은 사업영역측면과 자원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사업영역 측면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규모나 참가자가 지역사회에 있어 평소에 얼굴을 대하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일정 수준 성공을 하여 인재나 활용소재를 지역 외에서 얻거나, 제조 거점을 지역 외에 설치하거나, 외부의 자본이 참가하는 것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둘째, 자원측면에서 주부, 조기 퇴직자, 고령자 등의 지역의 인재, 지역자원에 기초한 농림수산물, 특산품, 전통 공예품 등 지역의 소재를 활용하고, 지역의 유휴시설 및 시민출자 등의 자금을 통해 지역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역의 경제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이러한 지역성을 기초로 변필성·윤영모(2011)은 재화·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커뮤니티완결형', '역외소비형', 내방자소비형', '크로스오버형' 으로 한 수익모델패턴에 따른 분류로 유형화 하였다.

<표1>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유형화

유 형	내 용
커뮤니티 완결형	재화·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부에서 완결됨 예) 주민에의 사회서비스 공급
역외소비형	지역외부인을 대상으로 재화·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함 예) 농어촌에서 생산한 특산물의 도시에 판매
내방자소비형	외부인이 지역을 방문하여 재화·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함 예)농어촌 체험관광
크로스오버형	역외소비형과 내방자소비형을 혼합함 예) 체험관광과 특산물 주문 생산·판매를 연계하는 도농교류사업

자료: 변필성·윤영모(2011), 박용규외(2009)

이러한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유사한 용어로서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SE)이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양자 모두 공익성, 영리성, 혁신성, 지속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의 달성수단으로 비즈니스 형태라는 점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2007년 7월1일부터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시행되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 경영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산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윤의 2/3은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다.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은 사회성과 영리성을 함께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이지만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모든 측면에서 지역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또한 정책목표의 차이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표2>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과의 비교

구분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사회적기업
정책목표	지역활성화 및 지역발전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지역성	자치단체와 연계한 커뮤니티 단위의 사업	전국적 단위의 사업
사업주도층	지역주민 주도	사회적 사업가 주도
인증조건	조건없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는 자
계획	2013년까지 1,000개 기업 육성계획	2012년까지 1,000개 육성계획

출처: 김선기(2011a)

일본총합연구소(2004)는 커뮤니티비즈니스 구성요소와 성립요건으로 사업성, 지역성, 변혁성, 시민성, 지역 공헌성을 들고 있다. 먼저 사업성은 독자 사업수입이 주요 수입원으로 지속되며, 사업수입원은 계속적으로 총수입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성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활동을 지속할 것을 내용으로 사업이 지역대상이 되는 것을 분명하고 있다. 변혁성은 사업이 지역사회의 과거해결을 목적이나 내용으로 하고 사업의 해결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시민성은 주민이 자본 운영상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을 내용으로 주민 이외 참여 스탭이 1/2미만이고 지역주민과 협력관계 확보하여 구성원이 참여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공헌성은 지역에서 과제해결에 공헌하는 것이 명확할 것을 내용으로 지역공헌에 대한 구체적 실적을 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3> 일본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성립요건
사업성	독자 사업수입이 주요 수입원으로 계속적 일 것	사업수입원이 계속적으로 총수입의 1/2이상 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속될 것
지역성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활동을 지속할 것	사업이 지역대상이 분명히 되어 있음
변혁성	사업이 지역사회의 과거해결을 목적이나 내용으로 함	사업의 해결 목적이 분명함
시민성	주민이 자본운영상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	주민이외 참여 스탭이 1/2미만일 것 지역주민과 협력관계 확보될 것 구성원이 참여하고 민주적 운영방식
지역공헌성	지역에서 과제해결에 공헌하는 것이 명확할 것	지역공헌에 대한 구체적 실적

출처: 일본총합연구소(2004),

Ⅲ.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의 추진과정과 지자체의 추진사례

1.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정책의 도입과정

서구 선진국에 있어 시장경제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경제체제의 운영에 있어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경험하고, 활력이 있는 시민사회를 목표로 하는 제3의 길에 대한 필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은 제3에 길에 대한 대안으로써 대표적인 “복지에서 노동으로”라는 슬로

건을 내걸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불리 우는 복지정책을 지향해 왔으나, 재정난과 노동의욕의 저하 등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1980년대가 되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이 전개되었으나 빈부의 확대, 실업의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제3의 길로 실업자에게는 생활자금을 단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훈련을 받게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실업 시에 받았던 복지혜택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부만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비영리조직 등 제3섹터의 역할이 커지고 제3섹터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커지게 되었다.

장원봉(2006)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 과정에 대하여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김진범외, 2009). 김영삼정부(1993~1998)은 1995년에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빈곤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자협동조합방식이 검토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자활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 시범사업의 실시에 따라 사회적 경제활동이 제도권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비롯된 경제위기 상황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된다. 정부는 대량실업 상태를 임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민간사회단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의 민간실업극복단체들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정부지원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1998~2003)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복지기조로서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자활지원센터를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실업극복단체들은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공공근로사업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사회적 일자리’라는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제도는 실업자들의 한시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2003~2008)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 온 생산적 복지를 넘어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이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민간 비영리단체로 한정하였고,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이 구체화되어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의 일환으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1990대 중반부터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어 왔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성과 영리성을 함께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이지만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모든 측면에서 지역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를 가진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영국에서 시작한 이후 영국모델을 벤치마킹 한 일본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하여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국가 또는 지역마다 등장한 배경과 특성을 달리한다. 국가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등장배경은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5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을 배경으로 한다(함유근·김영수, 2010). 첫째, 자본주의의 발전, 경제의 글로벌화,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응이다. 경제의 양극화와 도시화 등으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내부에서의 문제해결, 지역단위의 경제순환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부각되었다.

둘째 정부의 실패에 대한 보완이다. 재정적자 누적에 대응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민영화와 외부화가 진행되면서 민간부문의 협조가 점점 필요해지고 있다.

셋째, 관주도·하향식 지역개발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중앙정부나 제3자가 주도하고 지원하는 기존의 지역개발방식으로는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지역적 관점에서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넷째, 커뮤니티의 쇠퇴와 비영리시민활동이 필요해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발전, 지역간 경쟁의 격화, 급격한 고령화와 과소화 등에 따라 지역커뮤니티가 쇠퇴하는 문제가 확산된다. 이에 대한 자원봉사 등과 같은 비영리적인 시민활동으로는 지역단위의 사회서비스 공급이나 일자리 창출 등 지역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영적으로 사업화된 민간활동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증대이다. 기업의 사업분야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영국과 일본의 등장배경을 비교하면, 영국의 경우는 작은 정부 지향에 따른 변화와 시민사회의 육성과 지원을 통한 공적 영역의 흡수 등 정부실패의 보완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한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고령화와 글로벌화에 따른 지역간 격차확대, 국가 및 지자체인 사회참여, 고령화 글로벌화에 따른 지역간 격차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의 재정악화 등을 배경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김태곤 외, 2011).

2.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의 추진현황

현재 정부 부처별로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 등과 관련한 사업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사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육성사업',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 '마을단위농업공동체',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김태곤외, 2011).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희망근로사업을 업그레이드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자립형 지역 공동체 육성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주민주도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의미한다.

2010년도에 시범 도입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을 안정적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둔 마을기업으로 변경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전국적으로 500개의 사업단체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단체에게는 최장 2년간 총 8,000만원을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연차별(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로 지원하고,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금융지원과 경영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행정·기술지원을 위해 시군구·읍면동·농업기술센터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마을기업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성격의 조직이 자생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제공하는 사례를 계기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해 '농어촌공동체회사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지역성+공익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인 공동체로 구성된다. 사업주체의 형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법인, 농협 등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로 자립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경영방식(수익성)을 통해 운영된다. 즉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기여하는 조직을 의미하며, 마을단위 법인,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유형은 전국

235개소를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제공형, 복합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1년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예산은 13억 5,000만원이며, 2011 ~ 2014년 기간 중 한시적 지원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공동체회사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1억 3,50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 선정기관 지원한도는 5,000만원이고, 지원 성과가 우수한 업체는 1년간 추가 지원을 한다.

<표4> 한국의 중앙부처별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 사업현황

관련부처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행정안전부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마을기업)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형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병행추진 2011년부터 마을기업으로 개칭하여 사업 확대추진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농촌 자립기반 구축에 초점, 지역공동체 조직지원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초점
고용노동부 (2007년)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 2011년 5월 현재 532개 사회적 기업인증, 각종 경영, 재정, 홍보사업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초점
지식경제부 (2010년)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커뮤니티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능강화에 초점 1차 시범사업 이후 사업종료
문화관광부 (2010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노동부와 MOU체계을 통한 문화예술체육분야 사회적 기업육성
보건복지부 (2000년)	자활공동체 사업	지역자활센터가 중심,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등과 연계

자료: 김선기(2011a)

고용노동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인증제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공급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10년 말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 기업은 전국에 501개(2010)가 있으며, 지역별로 경기·인천, 서울, 경상도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이 있고, 지역별 인증 사회적 기업은 교육·보건·환경·보육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인증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재정·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영지원에는 경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지원 등, 재정지원에는 취약계층 고용임금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지원 등이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자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에 근거를 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현재는 이 사업은 중단되었다. 선정된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은 개소당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시범사업 기간 2010.7에서 2013.4로, 예산은 30억원(연간 10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0년에 국내외 7개 기관 및 단체와 MOU를 체결,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범사업에는 전국단위 매년 10개 사업체를 육성 지원하는 공모사업, 단계별 인력양성 등 지원체계, 시범사업의 전국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 정책개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교육사업, 네트워크 구축, 자원관리시스템과 사업운영관리시스템 등 지원체계, 시범사업의 전국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

정책개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홍보사업 등이 있다. 2010년 시범사업에는 전국 권역별 10개, 제주원 1개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자활사업과 사회적 기업, 자활사업과 사회서비스, 기타 자활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구분하고, 지역자활센터는 4가지 사업유형 중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를 운영하면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빈곤해소를 도모하고 자활공동체 창업을 모색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상과 같이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은 정부 부처별로 다양하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왔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가져오고, 사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일련의 반복적인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격차 확대, 지역사회구조로의 전환, 지역만들기와 연계, 지역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등을 배경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사업주체(지역 혹은 지역주민), 사업목적(지역문제 해결), 사업대상(지역자원활용), 사업공간(지역), 이익의 귀속(지역사회 혹은 지역공동체) 등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내발적 발전 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와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행안부의 마을기업 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특성보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 정책을 통한 일반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 및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소홀하기 쉬운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립적으로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가장 가까운 문제부터 출발하여 행정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문제를 공동체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내발적 발전을 통해 개성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창조를 도모할 수 있다. 획일화된 개발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성, 문화, 역사, 관습 등에 부합하는 개성 있는 지역사회를 주민주도로 창조로 과소화,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변화 추세에서 문화의 계승이나 지혜와 노하우의 전승 등을 통해 지역의 독자적인 개성을 축적할 수 있는 내발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다. 지역사업에 비즈니스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창업촉진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지역내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노령인구 등)이나 실직자 등에게 비교적 손쉬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지역사회를 기여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만족감과 보람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환경문제해결, 녹색생활실천과 같이 집단적 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지역문제에 대해 공동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현재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 정책의 실시에 따른 일반적인 기대효과는 중앙의 부처별 정책 추진의 목적에 따라 이러한 기대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현재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 정책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마을기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지자체차원에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추진사례의 특성을 살펴본다.

3. 전라남도의 추진사례와 특성

1) 마을기업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추진한 희망근로사업을 2010년 후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여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2010년에 150개의 시·군·구에 1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에 이 사업의 명칭을 다시 마을기업으로 변경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2010년에 선정된 기업도 마을기업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정부는 마을기업을 "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 혹은 지역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총칭하는 정책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1)

김선기(2011b)는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에 실시되었던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 마을기업 유형, 운영실태, 인력 및 재정구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마을기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자원활용형은 지역특산물,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으로, 58.2%를 차지하였다. 친환경녹색에너지형은 시민단체, NGO 등이 주도하여 쓰레기, 폐자원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태양열, 자전거활용 등 녹생에너지 실천사업과 같은 환경사업을 추진한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으로, 24.4%를 차지하였다, 생활지원복지형은 자립경영이 가능한 민간단체를 지원. 사회적 공헌운동의 일환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으로 예비사회적 기업과 중복되어 17.4%에 불과했다. 이들 사업분야는 경제분야가 26.7%, 환경 16.9%, 문화관광이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분포로 보면 동이 47.7%, 면이 38.3%, 읍이 14.0% 등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둘째, 운영실태 측면을 보면 이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사업주체는 40.1%가 비영리단체인 주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단체 중에서는 마을(운영)회사가 17.4%로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36.6%로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설립시기는 37.8%가 2009년과 2010년에 설립된 신생기업이어서 운영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23.8%는 2010년 공모제를 통하여 출범한 기업이다.

셋째, 인력 및 재정구조 측면에서 보면 영리법인은 보조금 지원 인력비율이 2.9%로 매우 낮은 반면, 비영리법인은 22.1 ~ 37.9%로 보조금에 상당히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당 연수입은 1억원 정도이며, 그 중 영업수익은 16.1%에 불과하고 운영을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형편이다.

전남의 마을기업은 2010년에 전체 172개사에서 전남은 19개사가 선정되었다. 마을기업은 3가지 유형 즉 지역자원활용형, 친환경녹색에너지형, 생활지원복지형 등으로 구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김선기(2011b)는 전남의 대표사례로 지역자원형 사업은 장흥 무산김주민주식회사를 들 수 있으며, 친환경녹색에너지형은 전남 순천시 녹색실버가게, 생활지원복지형은 전남 순천시 시니어공동체판매장을 사례로 들었다. 이들 전남의 대표사례에 대한 특징은 <표 6>과 같다.

전남에 지역자원형 사업사례는 국내 최초의 어업인이 설립한 주민주식회사로 산을 사용하지 않은 김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주민 주주인 110명의 어민이 참여하여 초기자본금 6억 3,500만원으로 주식회사를 출범시켜 생산, 가공, 유통을 일원화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친환경녹색에너지형 사업사례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가 사업화

된 사례로 순천시 장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음식물쓰레기, 하수구 악취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가정과 식당공공시설 등에 EM(유용미생물군)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지역대학의 협력 등이 사업성공을 견인하고 있다. 생활복지형 사업사례는 대한노인회순천시지회가 주축이 되어 지팡이 제작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업을 통해 수익과 노인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으며, 단순히 운영경비의 지원이 아니라 생산적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노인들 스스로 보람과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표5> 전남 자립형 지역공동체(마을기업) 사업의 유형별 대표 사례와 특징

유형	마을기업	내용
지역자원형 사업	장흥군 무산김 주민주식회사	국내 최초의 어업인이 설립한 주민주식회사 무산김 즉 산을 사용하지 않은 김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 주민 주주인 110명의 어민이 참여하여 초기자본금 6억 3,500만원으로 주식회사를 출범시켜 생산, 가공, 유통을 일원화함으로써 경쟁력 향상 110억원이던 소득을 2010년에 150억원으로 증대
친환경녹색 에너지형	순천시 녹색실버가게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가 사업화된 사례 순천시 장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음식물쓰레기, 하수구 악취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가정과 식당공공시설 등에 EM(유용미생물군)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설립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지역대학의 협력 등이 사업성공을 견인
생활지원복지형	전남순천시 시니어공동체판매장	대한노인회순천시지회가 주축이 되어 지팡이 제작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업을 통해 수익과 노인일자리를 창출 단순히 운영경비의 지원이 아니라 생산적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노인들 스스로 보람과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

자료: 김선기(2011b)을 기초하여 정리

2011년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전남에서는 2012년에 총 27개의 기업을 선장하였다. 여기서 신규 마을기업은 20개이며, 2011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중에 재심사를 통해 7개 기업이 재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

신규로 선정된 마을기업은 5,000만원의 보조가 이루어지며, 자부담을 포함하여 평균 61,58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1년 1차년에 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중에 7개 기업은 재심사를 통해 2차년도에도 3,000만원을 보조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2012년에 신규 선정된 20개 마을 기업의 조직형태는 민간단체가 11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법인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심사로 선정된 기업은 법인이 6개, 주식회사가 1개로 법인형태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1차년도에 선정된 민간단체는 2차년도에 법인으로 유도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표6> 전남의 기업마을 신규사업 선정 및 내용(2012년)

지역	회사명	조직 형태	사업내역
여수시	한몸영농조합법인	법인	건초 및 가축분뇨 재활용 퇴비 생산 판매
나주시	함께만들어가는세상	법인	향토음식 교육과 아침밥상
광양시	에코에너지푸드마을	민간단체	에코에너지 및 로컬푸드 사업
담양군	오룡딸기작목반	민간단체	친환경딸기가공냉동사업
	대숲마을식품	민간단체	죽순조청제조판매사업
곡성군	죽곡면 청년회	민간단체	대황강 HYO 수상레저 관광사업
구례군	지리산저메영농조합법인	법인	지리산청정100세나물소득화사업
고흥군	사동마을공동체	민간단체	고흥유자 및 매실을 활용한 효소(식초) 생산판매
보성군	벽옥영농조합법인	법인	가리실 전통식품 가공 유통
화순군	변천리마을회	민간단체	작두콩과 꾸지뽕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체험사업
장흥군	장흥식품	주식회사	기산 희망마을 전통식품생산
강진군	강진 청자골 그린모란된장 영농조합법인	법인	전통 된장 판매 사업
해남군	가족사랑 영농조합법인	법인	지역특산품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차별화 사업
영암군	왕인촌주민자치회(행복마을)	민간단체	향토문화음식사업
	삼호무화과정보화마을(정보화마을)	법인	무화과즙 생산 및 판매사업
무안군	일로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법인	볏짚제품 제작 및 판매사업
함평군	상모 천년전통발효식품 영농법인	민간단체	약초효소 장아찌사업
영광군	대치미 녹색 농어촌 체험마을	민간단체	농수특산물 주말장터
장성군	서삼면 모암마을 번영회	민간단체	편백활용향토식품 가공판매
완도군	어두새마을회	민간단체	해조류 고급브랜드화

자료: 전라남도(2012) 내부자료.

<표7> 전남의 기업마을 재심사업 선정 및 내용(2012년)

지역	회사명	조직형태	사업내역
여수시	영어조합법인	법인	소장마을 수산물 유통사업
순천시	(주)한솥밥동네가게	주식회사	한솥밥동네가게사업
곡성	곡성곶감영농조합법인	법인	곡성곶감 생산 집적화 사업
보성	보성방축삼베영농조합법인	법인	보성삼베 특산단지 육성
강진	해랑달이랑 영농조합법인	법인	전통한과 판매 사업
장성	불태산전통두부영농법인	법인	불태산 전통두부 제조판매
진도군	산들바람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법인	고향의 안전한밥상

자료: 전라남도(2012) 내부자료.

2) 농어촌공동체회사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4월 농촌지역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공동체 조직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커뮤니티비즈니스로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김광선 외, 2010).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농어촌공동체회사 3,000개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지역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443개소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중 사업계획서 등의 심의를 거쳐 올해 54개소의 우수 사업체를 선정하여 제품 및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은 이중에 13개소 우수 사업체가 선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 등 4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8>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현황(2011)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도시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제공형	복합형	합계
전남	8	3		1	1	13
전북	5	1			2	8
경남	2	1				3
경북	3	3		1		7
충남	1	1				2
충북	3	1		1		5
경기	1	2				3
강원	3	8		1		12
제주	1					1
합계	27(50.0)	20(37.0)		4(7.4)	3(5.6)	54(10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보도자료(2011.12.1)

2011년도 전국에서 54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그 중 전남은 13개 업체로 전국대비 24.1%에 해당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전남의 13개 업체는 전체에서 농식품산업형이 9개 업체로 69.2%를 차지하고 있다.

<표9> 전남지역의 농어촌공동체의 주요사업계획

사업 유형	회 사 명	조직형태	주요 사업계획	시군
농식품 산업형	순천시농특산물 유통영농조합법인	법 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농산물 가공품 홍보, 상품개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교육 등	순 천
	광양시특산물 유통사업연합회	법 인	농산물 쇼핑몰을 활용한 농산물판매 농특산물 대도시 직거래 판매 농특산물 제품 홍보 유인물제작 등	광 양
	사랑나눔	민간단체	지역특산품과 결합된 김치 개발 친환경 김치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이용 전문쇼핑몰 구축 등	고 흥
	보성농정회 (우리원)	민간단체	친환경농산물 가공 및 판매 제품디자인 및 포장관련 사업 생태농업 및 농촌문화 체험교육 등	보 성
	화순농특산물 유통(주)	주식회사	농가 생산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소량 농산물 프랜차이즈 마켓운영 공동브랜드 육성, 판촉 및 홍보 등	화 순
	나비골월송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법 인	농산물 시제품 및 브랜드 개발 쌀, 잡곡 등 소포장지 개발 팜플랫 등 홍보 유인물 제작 등	함 평

<표9 계속> 전남지역의 농어촌공동체의 주요사업계획

사업 유형	회 사 명	조직형태	주요 사업계획	시군
농식품 산업형	여민동락공동체	민간단체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 모싯잎 송편 특화 및 친환경인증 포장재 개발 및 체험관광 실시 등	영 광
	(사)한국농업경영인 장성군연합회	민간단체	지역농업인 경영구조 개선교육 지역농산물 개발·홍보 및 판매 도시민 초청 농산물 체험판촉 등	장 성
	청해진미완도전복(주)	주식회사	통조림 등 전복가공식품 기술개발 온라인 등 특산물 홍보 및 판매 전복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완 도
복합형 사회적 기업	스마일사업단	민간단체	도시민 대상 전통 장류 제조·판매 지역축제 상품 제작·판매 농어촌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등	곡 성
	배뫼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	법 인	오감 만족형 농촌 체험마을 운영 농산물 가공 및 쇼핑몰운영 판매 농산물 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 등	무 안
지 역 개발형	친환경스터디 영농조합법인	법 인	친환경 과수 재배기술 교육 친환경농업 생산, 유통, 가공사업 체험교육, 농산품 홍보 및 판매 등	영 암
도 농 교류형	(사)전라남도 친환경농업교육원	민간단체	친환경 유기농업 전문교육 운영 친환경 유기농산물 판매 농촌마을 체험 팜스테이 운영 등	담 양

자료: 장덕기(2012)

Ⅳ.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에 대한 한계

최근에 한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정책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취약계층이 급속하게 늘어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커뮤니티비즈니스 또는 이와 유사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임시적이고 일회적이었던 일자리사업을 커뮤니티비즈니스와 같은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CRS)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따라서 정부, 기업, 시민단체 모두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짧은 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하나의 사회적 추세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정책방향 아직 확립되지 않아서 중앙정부에 의한 단기적인 정책목표에 머물러 있다. 현재 한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추진은 부처별로 단기적인 목적에 따라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행정안전부는 초기에 일자리창출에 주안점을 둔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가 지역 활성화로 목표가 이동하고 있는 반면, 농림식품부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활력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마을기업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의 대상이 되는 읍면 단위에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 추진에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즉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두 정부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중복적으로 수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차별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단기적인 정책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기업의 자생력도 취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중앙주도적 부처별 유사사업 분산 추진과 양적인 확대가 우려된다. 현재 중앙정부 주도하에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 정책을 행정안전부, 농림식품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적격한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육성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체를 양적으로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공모를 통한 평가 및 선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군 간에 골고루 안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실하고 경쟁력이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체를 육성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이 직접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민간 혹은 시민단체가 정부에 의존성을 심화시켜서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독자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온 시민단체들이 정부지원을 통해 자금이나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독자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차별성도 줄어들게 될 우려가 있다.

넷째,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일자리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어 기업차원의 비즈니스 차원에 개념이 매우 약한 상태이다. 더욱이 사업주체의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의 시행체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업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을 지원받은 이후 사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첫째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해 지자체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기업간의 창조적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내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핵심 아젠다를 설정과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차원에서 지역의 기업이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통로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경제적 동기 부여 등의 환경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NPO를 포함한 지역주민도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직접 수행하거나 문화, 복지, 환경 등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협력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Porter(1995)는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인너시티(inner city)의 개발에 있어 도시화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방식을 지역사회의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보았다. 즉 민간주도로 경제적 자기이익에 대한 수익 사업과 투자를 위해 지역사회에 의한 비즈니스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이거나 사회적 문제이든 과거처럼 정부기관의 주도하에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없으며, 지역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적 모델이 수익을 내고 지속적인 경제적 기반이 자생력을 가질 때 지역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여 다른 지역에서 복제가 불가능한 틈새시장이나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 활용 극대화와 비즈니스 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참여주체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사회, 나아가 도시를 지탱하고 재생·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사업 참여 주체가 인식이 부족하고 동기부여가 어렵기 때문에 활동적인 사업가나 리더의 역할 및 뜻을 같이하는 공동체의 집단적 선도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 낼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규모는 작더라도 지역 내의 각 산업이 유기적으로 상호 순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참여주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밀착형 비즈니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이 연결자의 통로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NPO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2009)에 의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보면 정보수신발신·조사연구, 이벤트 개최, 인재육성, 일반상담, 전문가 연계지원, 매칭코디네이트, 지원시설의 운영, 모임장소의 제공, 펀드·금융연계 지원, 협동추진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설립 희망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인가, 등기, 자금조달, 운영까지 각 단계별로 전문가를 동원하여 지원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초기단계에서 사업비 지원이 없는 경우에 창업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책의 초기단계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정책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창업을 촉진할 필요는 있지만,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지역공동체는 법인격을 갖춘 지역공동체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기업운영에 대한 노하우 부재에 따른 기업의 컨설팅 기능 강화를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 기업운영에 대한 기업의 영업 및 조직 경영상에 노하우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창업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의 중심적 역할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체와 관련사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네트워킹의 강화가 필요하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해야만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초기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더욱이 지원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있어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 존재하는 행정(지자체), 기업 상점, 금융기관, 커뮤니티 비즈니스,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각 분야 전문가, 자원봉사자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제구축을 통해 여러 정보를 일원화하고, 상호활동을 효율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주민참여를 통해 기획·추진하도록 하면서,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조직 등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중간지원조직은 마을만들기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정비에 있어 기존 마을공동체사업을 포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은 노무현정부 당시에 2006년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특별위원회'설치규정을 만들어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이 국가 정책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에 당시의 정부 8개 부처에서 총 96개의 지원과제를 1차적으로 발굴하였으며 이중 예산사업이 71개, 비예산사업이 25개에 달한다. 또한 지역유형별로 도시가 26개, 농촌이 39개, 섬이 1개 공통과제가 30개로 구분되어 부분별 시행계획을 위한 투자비가 16조6,495억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에서 지역발전으로 정책기조가 바뀌고, 재원의 조달 및 운영의 패러다임이 변경되면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도 변경·폐지되었다. 이에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가 산발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커뮤니티비즈니

스 정책은 기존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통해 형성된 잠재력과 연계시키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곤란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다양한 자금지원정책들은 지역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공동체회사들의 설문조사(장덕기, 2012)에 따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부족을 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우수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자금지원에 있어 직접지원방식을 줄이고 다양한 간접지원방식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정책의 가이드라인과 예산지원의 역할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주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가야 할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확립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섯째, 농산어촌으로 귀농·귀촌하는 인재와 토착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매너저 역할을 할 인재를 발굴하여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매너저는 지역자원을 재평가하고 지역경쟁력을 기초로 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핵심인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커뮤니티비즈니스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에 대한 인적자원 발굴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Ⅴ. 결 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역 경제에서 정책적 대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의 추진과정과 추진현황을 살펴보았고,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과정에 있어 한계점과 더불어 지역경제차원에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과제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의 한계로써 첫째,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해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책방향 아직 확립되지 않아서 단기적인 정책목표에 머물러 있다. 이에 현재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추진은 부처별로 단기적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중앙주도의 부처별 유사사업 분산 추진과 양적인 확대가 우려된다. 현재 중앙정부 주도하에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 정책을 행정안전부, 농림식품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적격한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이 직접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민간 혹은 시민단체가 정부에 의존성을 심화시켜서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넷째,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일자리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어 기업차원의 비즈니스 차원에 개념이 매우 약한 상태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의 목표를 지자체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연발생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공감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창업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의 중심적 역할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체와 관련사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네트워

킹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일반 금융 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다양한 자금 지원 정책은 지역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농산어촌으로 귀농·귀촌하는 인재와 토착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 매너저 역할을 할 인재를 발굴하여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광선·권인혜·김창호(2010).『농촌지역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선기(2011a).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정책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KRILA Focus』, 제37호.

김선기(2011b).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 『지방행정』, 제60권, pp.32-35.

김윤호(2010).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1호, pp. 275-299.

김영수·이광우·권주형(200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제9권 1호, pp.77-96.

김재현(2010).『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방안』건국대학교.

김태곤·박문호·김경덕·김용렬·허주녕·김정승·임지은(2011).『커뮤니티비즈니스 중장기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진번·정윤희·이승욱·진영환(2009).『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방안 연구』국토연구원.

김혜민(2010) “일본 커뮤니티비즈니스 조직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82권, pp.171-195.

변필성·윤영모(2011).『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연구』국토연구원.

박용규·최숙희·주영민(2009).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지역경제 활성화,『Issue Paper』, 2009.9.21, 삼성경제연구소.

유정규(2011). “커뮤니티비즈니스 동향과 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CB연구회 발표자료.

장덕기(2012). 전남지역 농어촌공동체회사활성화방안,『리전인포』,제270, 전남발전연구원.

함유근·김영수(2010).『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삼성경제연구소.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川上総一(2007)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사업에 대한 일고찰: 가나가와현 즈시시 사례를 중심으로”,『일본학보』제72, pp. 297-307.

日本総合研究所(2004).『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の可能性と展望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細内信孝(2001),『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中央大学出版部.

NPO법인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サポートセンター (2009)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地域コーディネートハンドブック』.

Pearce, J.(1993). At the heart of the community economy. Community enterprise in a changing world. Lodon, Calousete Gulbenkian Foundation.

Porter, Michael E.(1995),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Inner City,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pp.55-71.

Tony GORE., Ryan POWELL and Peter Wells. (2006), “The contribution of rural community business to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Local service and local people, Centre for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80, pp.29-52.

Tracey, P., Phillips, N., Haugh, H.,(2005), “Beyond Philanthropy: Community Enterprise as a Basis for Corporate Citizenship”, Journal of Business Ethics 58, pp.327- 344.

<Abstract>

Propulsion and Regional Challenge of Community Business Policy in Korea

Na, JuMong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addition to the spread of neo-liberalism in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in Korea without employment growth, aging, regional economic downturn, concerns about the deconstruction of the community are emerging. Community business(CB) as an alternative opportunity in Korea has been growing concern. In this study, increasing interest CB policies and look at the status in promoting the process, for which the regional level for the local economy and tried to consider this policy challenge.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for the challenges of business policy is as follows. First, the CB about local government should clarify the objectives of the policy. Residents, local governments, businesses based on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the creative partnership to be possible to elicit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people and the spread of the community consensus is required.

Second, Local governments to create 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from the early stages of CB needs comprehensive support.

Third, the local economy in order to support the initial establishment, as well as surveillance is needed. To do this, the CB through the central role of local government business and related businesses through organic link of the strengthening of networking is required. Fourth, the CB at the regional level is necessary to create a fund. A variety of central government funding policy at the local level should be designed to operate integrated. Fifth, Human resources as the farmers returned to the soil and rur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must build governance. Managers of CB should identify and It is important to train CB's manager for professional education.

Key Words : CB(Community business), Policy, Regional Challenge

논문접수일 : 2012년 06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2년 06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6월 29일